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

2019.9.17(화) 오후 2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Contents

순서 / 1

발제문

지원방안 혁신의 시작을 함께 논의한다 3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토론문

예술지원 심의제도 개선 관련 검토 사항 25

권 신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토론문

예술가(단체)의 입장이 되어 되짚어 본 지원 심의제도 31

배선애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회장, 연극평론가

토론문

지원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37

박수연 문학평론가

토론문

지원심의제도 관련한 의견 43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토론회 순서

구 분	이 름	이 력	비 고
사회	조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 14:00~14:30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토론 14:30~15:30	이희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권 신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예술 일반
	배선애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회장, 연극평론가	공연
	박수연	문학평론가	문학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시각
질의 응답(30분)			

발제문

지원방안 혁신의 시작을 함께 논의한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

“지원방안 혁신의 시작을 함께 논의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Ⅰ. 추진배경 : 이래서 시작하였습니다.

1. (심의제도개선은) 현장의 신뢰 재구축을 위한 우리의 의지 표현

모든 것을 공급자가 아닌 예술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

2. (심의제도개선은) '현장지향적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예술현장에 조응하는 유연한 심의제도 마련

3. (심의제도개선은)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제도의 실험으로 달성

장르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심의제도의 실험적 운영 필요

4. (심의제도개선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 예술계의 신뢰와 결과 수용도 제고

Ⅱ. 추진경과 :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01. 지원심의제도개선TF 구성(2019.7.18~)

* 위원장 지시사항('19. 7월 월간회의) : '20년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추진 / 총8명 구성

02. 리서치 및 내외부 의견수렴(~8월말)

* 외부 라운드테이블 6회(22명, 8.12~8.14) / 사업부서 의견수렴(8.23) / (3개)소위원회 토론 / 위원-사무처 워크숍(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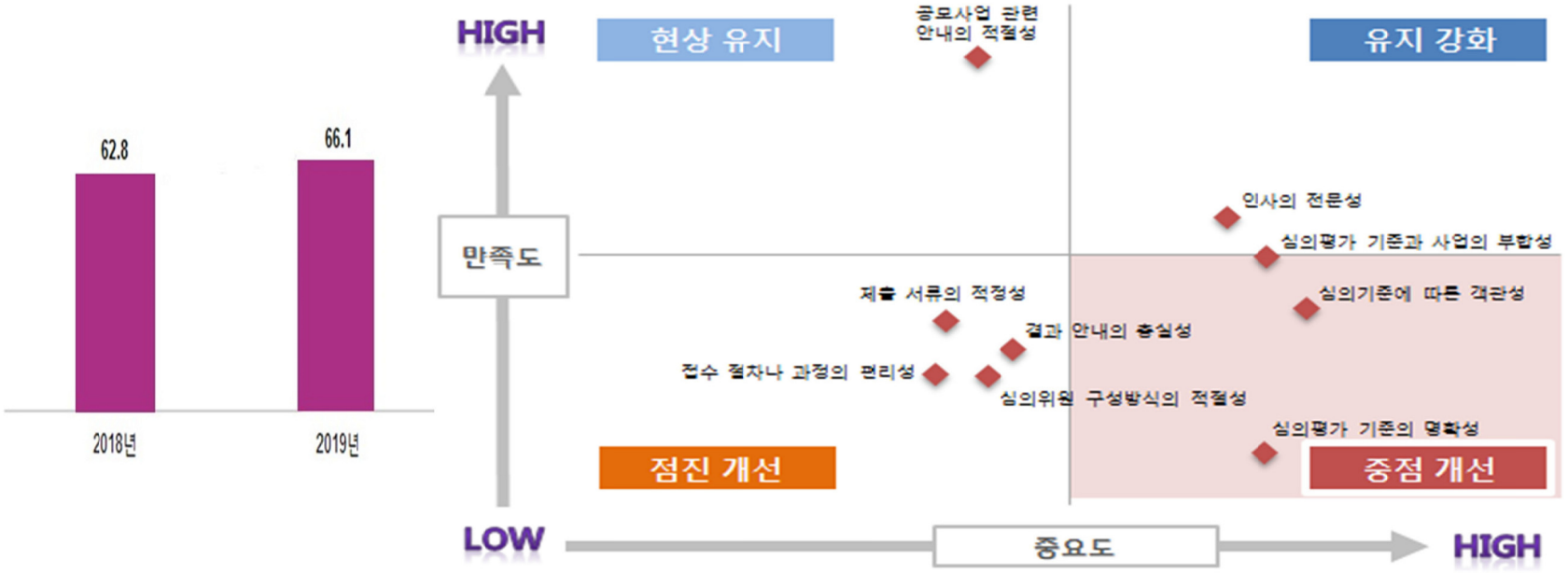
<참고 : 지원심의제도개선TF 운영절차>

1. 리서치 및 의견수렴	▶	2. 쟁점 도출 (TF 집중회의)	▶	3. 개선방안(초안) 마련	▶	4. 의견수렴 및 검토(예정)
▪ 국내·외 사례조사 ▪ 공정심의 설문조사 ▪ 이해 관계자별 라운드테이블 ▪ 위원/직원 의견 조사		▪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심의위원 개방의 가치충돌 ▪ 심의진행방식 검토 ▪ 심의결과 수용도 제고 노력		▪ (TF) 전체적인 방향성 마련, 지원심의관련 규정 및 지침 보완 ▪ (사업부서) 사업별 심의제도 적용(안) 검토		▪ 위원 워크숍을 통한 최종검토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9월) ▪ '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국설명회 시 개선사항 안내

Ⅲ. 문제점 : 이렇게 도출하였습니다.

2019년 정시공모 사업 공정심의설문조사 결과(중요도-만족도 분석)

- 심의절차의 공정성 인식은 '18년 대비 4% 상승 ('19년도 정시공모 사업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5,188명 중 1,087명 응답)
- 상대적으로 심의기준, 결과안내, 심의위원 구성, 접수절차, 제출서류 등의 만족도는 낮음



Ⅲ. 문제점 : 이렇게 도출하였습니다.

2019년 정시공모 사업 공정심의설문조사 결과 (향후 개선 요청사항)

구분	개선 요청 사항	응답 비율
평가 및 선정 기준	다양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42.1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30.1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	12.4
심의위원	전문성/자질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14.8
진행 및 서류 절차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18.0
	일정이 여유롭게 확보되어야 한다.	2.1
안내 및 홍보	결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9.8
전반적 운영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6.6

Ⅲ. 문제점 : 이렇게 도출하였습니다.

문제점 정리

신청서 양식의 복잡성

- 중복된 내용 작성 요구, 행정용어 사용,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
- 이해불가 항목, 제출서류의 필요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의제도 운영 미흡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방식** 마련 필요

  예) 현장 흐름과 맞지 않는 1회성 공모사업지원 방식

Ⅲ. 문제점 : 이렇게 도출하였습니다.

문제점 정리

심의제도 운영전반 현장과의 공유부족으로 낮은 결과 수용도

- **늦은 결과 발표**로 예술인들의 타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발생
- 결과 발표 **안내 메시지** 전송 미흡
- **부실한 심의 총평**으로 예술인들의 결과 수용도 미흡
-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지역(재단)과의 협력 연계 부족

-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지역 협력 및 연계 노력 부족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1. 예술가의 입장에서 신청서 양식 및 심의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청서 양식 개선 방향

- 유사중복 항목 정비, 이해하기 쉬운 생활용어화,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 필요한 최소항목으로 구성

<예시>

· **유사중복 및 심의 불필요 항목** : 기획의도/사업목적, 기대효과/파급효과, 사업추진방식/추진절차, '자유롭게 쓰시오' 항목에도 일정 가이드 필요, 관객개발/홍보효과

· **생활용어화** : 집행 정산→교부금 정산 / 가중치→비중 / 제언→개선사항, 의견 / 제고→높이기 / 기→이미 / 의거→따라 / 신청액 총액→총 신청액 / 한자 要→필요 / 백만 원 단위→원 단위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1. 예술가의 입장에서 신청서 양식 및 심의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심의기준 개선 방향

- 심의기준의 불명확성 구체화, 중복문항 해소, 불필요 항목 삭제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심의기준 항목을 선별하여 양식 최적화

<예시>

· **심의기준의 불명확성 :**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과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모두 충실성 평가

- **2020년 예술현장과 신청서 양식과 심의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2. 소통과 참여 확대로 '열린 심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심의 참여· 개방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 '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온라인 등록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정교화
- 심의위원 외에 자문, 사업평가위원, (수시)현장의견 수렴 등 다양한 분야로 적극 활용하여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

구분	기존	개선
채널	▷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엑셀 관리	▶ 예술위 홈페이지 연계 <전용 시스템> 접수
신청	▷ 추천제(협/단체 추천, 자천, 타천)	▶ 등록제(본인 인증을 통한 직접 등록)
선정	▷ 연 1~2회 모집 및 선정	▶ 연중 상시 모집 및 분기별 선정
분야	▷ 7개분야 51개 세부장르 모집	▶ 7개 분야 61개 세부장르 개편
운영	▷ 임기제(기본 1년, 최대 2년), 심의 총량제 (연 10회) 동시 운영	▶ 임기제 폐지 ▶ 심의 총량제 연간 → 누적제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2. 소통과 참여 확대로 '열린 심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심의위원 사전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수립

- 심의단계별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필수 안내 사항 제작
- 중요한 사항은 사업별 안내가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함

1차 서류심의결과 발표로 단계별 심의과정 공유

-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모든 신청자에게 결과발표 문자 안내 서비스 발송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2. 소통과 참여 확대로 '열린 심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2차 PT심의 시 인터뷰 시간 확대 및 토론형 심의방식 진행

- PT시간 대비 인터뷰 시간비율을 최소 2배로 확보
- 면접 과정에서 신청자의 작품/기획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심사결과 발표 안내 가이드라인 마련

- 탈락자들에게 보다 친절한 안내를 위해 결과발표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작성
-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접근
- 심의위원 구성방식 공개, 심의과정, 심의총평 가이드 등 과정공유 확대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2. 소통과 참여 확대로 '열린 심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결과 발표 후 심의과정 공유의 장 마련/(예) 심의포럼, 심의스토리

- 심의위원이 심사과정의 소회, 중점 고려사항, 특이점, 아쉬운 점 등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
- 심의과정 이해, 결과의 수용도 및 발전적 상호학습과정 기회제공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성과공유의 장 마련

- 위원회가 지원한 예술가(단체)의 사업성과가 무엇인지 현장에 구체적인 정보제공 필요
- 홈페이지나 사업별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예술현장 교류 확대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3. 창작과정을 존중하는 '현장지향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책임심의위원제 운영

- 과정지원 사업으로 심의위원 사전공표, 단계별 심의에서 사업평가까지 연계
- 2020년 시범적용사업 :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국민참여를 위한 관객평가제 확대

-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반영비율 확대(10→20%)
- 공연분야 외 타분야로 확대 :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서평단 운영 (2021년 예정)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3. 창작과정을 존중하는 '현장지향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다양성·장르별 특색을 반영한 트랙 운영

- **(불필요한 서류심의과정 삭제)** 서류심의 없이 2차 심의대상 선정
  - 적용사업 : 시각예술 전시사전연구지원→전시지원 연계 지원
- **(수시지원제도 확대)** 현장 주기를 고려한 **분기별, 반기별** 복수 운영
  - 적용사업 :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등

공정심의평가관제 운영

- 유관기관 추천을 받은 직원이 심의회의에 참관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평가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4.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협력형 심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협력형 추천제도 운영

- 지역협력연계 일환으로 지역에서 선정 또는 검증받은 단체를 추천받아 심의 후 지원
- 2020년 시범적용사업 : **신나는 예술여행(청년예술형)**

찾아가는 심의

- 필요시 권역별 거점에서 지역 재단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는 지역협력형 심의 모델 실험(예정)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5. 문화예술분야 '자부담 적용'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단기) 2020년 자부담 적용제외 확대

- 자부담 폐지를 위한 출발선에서 '20년에는 자부담 적용 제외사업 확대
- 2020년 자부담 적용제외 기준 마련 : 청년대상, 리서치, 실험적 활동, 비평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창작아카데미 등 포함

(장기) 자부담 폐지를 위한 공론화 확대

-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보조금 자부담 폐지를 위한 활동노력 지속

Ⅳ. 개선방향 :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기)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자부담 제외 현황

구분	사업명	공모예산(백만원)	담당부서	'18년	'19년
문학 창작육성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800	문학 지원부	0%	0%
	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800		10%	0%
	창작산실) 문학비평및연구지원	100		10%	0%
	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250		10%	0%
시각예술 창작육성	**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	25	시각 예술부	10%	0%
	창작산실) 비평지원	70		10%	0%
공연예술 창작육성	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창작뮤지컬	300	공연 창작부	0%	0%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100		0%	0%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300		10%	0%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300		10%	0%
국제예술교류 (전 분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575	국제 교류부	0%	0%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400		10%	0%
청년예술가생애 첫 지원 (전 분야)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960	시각예술부	10%	0%
예술인력육성 (전 분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	1,008	아르코 예술인력 개발원	0%	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시각예술)*			0%	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공연예술)*			0%	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기획(aPD))*			0%	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무대예술)*			0%	0%
	문화예술기관단체연수단원지원*	4,980		4대보험전액	4대보험전액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2,700		4대보험 전액	4대보험 전액
문화예술향유지원 (전 분야)	신나는예술여행(시설매칭형)*	10,000	순화 사업부	0%	0%
	신나는예술여행(시설발굴형)*	6,454		0%	0%

Ⅴ. 향후계획 : 실천을 위한 약속

01. 심의제도 개선은 장기과제로 이제 시작에 불과

02. 2020년에 적용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적용

03. 심의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 사업구조 개편이 먼저 논의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심의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추진 예정)

04. 향후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보다 현장지향적 제도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

지원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
"지원방안 혁신의 시작을 함께 논의한다 "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토론문

예술지원 심의제도 개선 관련 검토 사항

권 신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예술지원 심의제도 개선 관련 검토 사항

권　신(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 심의제도 운영 현황**

- 공연, 시각, 문학, 연구/평론, 지역예술 등 분야별로 매년 첨삭하여 축적해가는 방식으로 총 868명(2019기준) 심의위원풀 운영 중
- 추천위원회를 2018년 도입, 재단 지원사업 담당부서에서 6배수를 제안하고 추천위(7명)에서 3배수로 압축해 우선순위 지정한 추천명단을 결정하면, 심의계획에 반영함.
- 전체적으로 인터뷰심의 진행(문학 제외)하며 심의방식(토론, 합의도출 등)은 심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함. 기피신청제도 운영 중이며 블라인드 심의 미도입
- 심의결과 선정현황(선정자, 사업명, 지원금액)과 심의위원 명단, 심의총평을 공고
- 심의위원과 구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과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의 창작지원은 평가주관단체(전문평가단 구성)를 분야별로 별도 운영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환류 되도록 운영함

○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계 전반의 <공동 심의위원 Pool> 구성 활용**

- 예술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관별 심의위원 Pool의 구성 활용에 따른 참여성, 전문성,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공개추천 등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예술계에 의한 공개 추천 및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예술분야, 장르 및 지역별로 예술계에서 광범위하게 공개 추천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예술위원회 중심으로 예술계에서 합의가능한 전문가 Pool 구성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전국적 예술계 네트워크 및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술계의 참여도, 예술적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분야 협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예술분야 및 활동장르, 지역별 전문가를 함께 추천하여 전국 단위의 <공동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고 중앙, 광역, 기초단위의 예술지원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함.
- 공동심의위원 Pool -> 심의위원 후보단(기관별, 사업별) -> 심의위원회 구성

○ 공정한 심의위원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선정)위원회> 제도 체계화 필요

- 심의위원 구성은 공개, 자유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규모 심의위원 후보단을 확정하고 지원기관에서 필요한 분야의 심위위원을 3~5배 추출하여 섭외 우선순위를 별도의 절차로 정하는 예술위원회 사례와 심의위원 추천(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압축 및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기문화재단 사례 등 다양한 추천(선정)위원회 운영 사례가 있음
- 2019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상설위원회)하고 위원후보군(Pool) 구성과 위원 선정방식 명시 등을 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 추천(선정)위원회 제도가 정착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추천(선정)위원회는 심의위원풀 또는 후보단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적용되기 보다는 심의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심의위원 선정과 섭외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필요함. 추천(선정)위원회에 심의위원풀 또는 후보단이 제시되고 지원기관에서 설계된 지원사업과 심의분야에 따라 심의위원 수 등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위원을 추천 또는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추천(선정)위원회는 심의 분야에 대한 경험과 관련 예술계 현황과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 중견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상설운영보다는 다양한 예술지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예술지원사업에 따라 추천(선정)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임.
- 예술지원기관 별 심의위원 Pool 또는 공동의 심의위원 Pool이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제도로서 작용하고 심의위원 추천(선정)위원회가 심의위원 구성의 절차로서 도입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제도에 한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됨

○ **예술지원에서의 자부담, 수입금 처리방안**

- 그간 예술지원은 보조사업으로서 예술프로젝트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예술위원회에서 문학, 시각 등 개인예술가의 경우 자부담 의무를 면제하기는 했지만 2017년까지 예술단체 자부담 의무사항을 적용하여 운영해왔음. 예술단체의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그 이후 예술단체 자부담은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예술계 현실에서는 자부담 의무조건의 폐지로 이해되고 있음.
-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예술프로젝트에 자부담 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예술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사업성 있는 보조사업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측면이 많으나 예술창작 및 예술활동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술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17년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도입 이후 보조사업의 수입금 반납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보조사업은 수입금을 원칙적으로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공연, 전시 등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예술단체는 수입금의 처리와 반납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기존의 자부담을 없애기보다는 보조사업의 사업성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제고의 장점을 살리고 수입금 반납의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수입금과 자부담을 연계하여 보조사업 계획 수립시 예상수입을 자부담으로 선편성하고 수입금 발생시 반납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예술지원은 예술창작과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비 집행, 정산에 대한 관리가 수반되면서 예술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문학과 같은 일부 예술분야는 상금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간략한 정산방식으로 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다수 예술지원은 기업과 법인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과 정산이라는 보조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다양한 장려금과 수당 성격의 지원제도를 생애주기별(청년, 고령 등), 문화소외지역, 위축된 예술분야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술계 지원제도로 도입 검토 필요

토론문

예술가(단체)의 입장이 되어 되짚어 본 지원 심의제도

배선애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회장, 연극평론가

예술가(단체)의 입장이 되어 되짚어 본 지원 심의제도

배선애(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회장, 연극평론가)

‘심의제도 개선 예술현장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의 토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다. 매우 중요한 토론회라는 것을 알지만, 현재의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위원 라운드테이블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새로 제안하는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들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참고자료를 다시 읽어보니 헤드라인에 2020년 심의제도를 “예술가의 입장에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예술가의 입장’. 그렇다면,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심의제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신청을 한 예술가(혹은 단체)라면 심의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고 궁금할 듯하다. 첫째, ‘누가’ 나(혹은 단체)의 지원서를 심사했는가? 둘째, 나(단체)의 선정 여부를 떠나, 지원사업의 최종 심사결과가 납득이 되는가? 셋째,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는 왜 떨어졌는가? 이 세 항목에 주목해서 기존의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향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 ‘누가’ 나(단체)의 지원서를 심사했는가?

이 질문은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문위)가 심의위원 개편에 주력했다는 것은 각종 지원사업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영역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었다면 현재는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었고(단적인 예로, 심의했던 연극분야 관련 사업 중에서 연극평론가가 2명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다양성이나 개방성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전문성 부족이 큰 문제로 느껴졌다. 심의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을 거의 안하는 경우, 인터뷰나 실연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최종선정과 관련된 종합토론 자체를 버거워하는 경우 등등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개별 예술가(단체)에 대한 이해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서를 검토했는

지도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아무래도 무작위로 추천되는 심의위원 풀을 조성할 때 전문성을 전제하였지만 그 자체를 검증하지는 못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TF팀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개방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찾으려는 데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수검토제라고 생각된다. 심의위원은 사전에 미리 신청서류들을 제공받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심사항목에 의견을 적어 넣은 서류를 심의 당일 제출하는 방식의 전수검토제는 신청 서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심의위원이 적극적이었으며, 심의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의 전수검토제는 공정성을 담보한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지원사업의 1차 서류 심의에서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심의위원 위촉을 할 때와 심의 전 사전 회의를 진행할 때 사업의 의미와 목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심의위원의 책임감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거기에,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책임심의위원제도도 환영할 만하다. 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표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본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나 중장기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연극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업들은 심의위원을 사전 공표하고 심의는 물론 사업 평가까지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심의위원제도가 유효하다고 본다. 사업의 중대성 환기와 심의의 공정성 등을 고루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결과 발표 시 심의위원의 이름만 적지 말고 소속이나 직업을 함께 적을 필요도 있다. 성심성의껏 작성한 신청서를 누가 심의했는지 궁금한 단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이름만으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심의위원들이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가 전제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안과 개선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나(단체)의 선정 여부를 떠나 지원사업의 최종 심사결과가 납득이 되는가?

이 질문은 심의과정과 결과 발표에 해당한다. 심의과정에서 인상적인 것은 사업의 실무담당자들이 심의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픈 선례 덕분이지만) 사업 목적, 의미, 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 이외에 더 관여하는 바가 없다.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혹여나 심의관여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답변하거나 회피하는 것, 거기에 심의 제척과 회피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도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 보완되길 바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토론이다. 1차 서류심의에서도, 2차 인터뷰나 PT, 실연 심의에서도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심의위원의 구성 자체가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시선으로 단체(개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서류를 비롯한 심의대상의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다. 토론 시간이 길더라도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단체(개인)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한문위의 고민은 최근 제안된 '심의총평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전에 작성한 총평을 보기로 삼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총평에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신청한 모든 단체들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 결과를 납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사업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지만 심의 결과 도출 과정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TF팀의 '쌍방향 소통방식 강화'의 내용이 결과 발표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셋째,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는 왜 떨어졌는가?

심의 총평에는 선정된 단체(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서술하고, 선정되지 못한 단체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심의기준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밝힌 것은 이 기준에 부합한 단체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정단체의 장점을 서술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반복하는 듯하다. 지금까지 강의하는 동안 A+학

점을 받은 학생이 자신이 왜 A+인지 문의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문제는 B나 C학점을 받은 학생들이다. 채점기준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이 왜 이 학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은 총평에 막연하게 서술한 문제점으로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다. 선정되지 못한 분명한 이유,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정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 TF팀에서 낙선자 포럼이나 심사이야기 등 결과 발표 이후 공유의 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선정되지 못한 구체적 이유가 궁금한 단체들이 모여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향후 지원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결과 발표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우선 1차 서류 심의에서는 개별 단체 별로 전수검토의 심사항목에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공개되는 것이 전제되면 전수검토 항목 별 서술 가이드라인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서류 검토를 하면서 심의기준에 맞춰 평가한 내용들이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게 공개되면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2차 심의는 보다 신중하게 결과 발표를 해야 한다. 2차까지 선정되었는데 최종 탈락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평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단체(작품, 개인) 별로 서술한 심의 내용을 정리해서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게 개별 안내를 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번거롭겠지만, 단체 입장에서는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존중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 수용도가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심의는 항상 논란이고 불만이다. 문제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TF팀에서 제안한 개선안과 보완 방법들에 대해 일단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책임심의위원제는 물론이고 관객평가제를 확대하는 것도 환영할 일이며, 지원시기에 휘둘리지 않는 수시지원제도도 반가운 일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집중적으로 고민한 결과인 만큼 필요한 세부 항목들을 더 보완하면서, 2020년부터 바뀌는 심의제도에 기대를 걸어본다.

토론문

지원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박수연
문학평론가

지원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박수연(문학평론가)

* 2020년 지원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내용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결과의 설득력임.

* 심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구성방식, 심의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함.

  :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시도와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충실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문적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기 때문임. 어떤 제도이든 관련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시행 기관이 현실적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일 것임.

  : **심의위원 운영**에서 개방성 지향하겠다는 방안이 이해충돌에 따른 사전 잡음을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느냐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심의 진행방식**도 마찬가지임. 다만, 관객(독자)평가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임. 이것은 문학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주체들을 한데 묶어 해결불가능한 늪으로 이끄는 것일 수도 있음.(문학의 경우, 장르물, 라이트노벨 등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

* 심의결과 수용도 제고 노력이 지원 선정 탈락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마련하기도 하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음. 모든 지원자는 자신의 작품이 가장 훌륭하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결국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섬세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

: **탈락자 작품 논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임. 심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심의위원이 일대일로 처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임. 이 경우 심의위원의 논평은 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임.

: '평가 환류 강화 및 적용가이드라인 마련'이 예술작품의 정답 찾기로 오해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협력사업**은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사업에 대한 장악력을 갖기 위해서이고 섬세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임. 장악력과 섬세함이 있어야 작품의 수월성을 평가한다는 기초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이를위해서는 지원신청작품들의 20%로 선정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제기되는 많은 문제의 근원에는 전문성과 우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일방 소통 시대에서 정보접근 통로의 개방성과 민주성이 소통의 근간이 되는 시대로 이전하는 맥락 속의 특별한 요청이 있음.

==> **다매체시대 문학예술의 존재방식**을 고민하고, 생산물을 제고하려는 모색의 결과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위한 방법과 심의내용을 무리없이 수용하도록 하려는 방법을 도출하려는 것.

: 작품의 수월성과 지원의 형평성 사이에 충돌이 있음. 그러내 우수 작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준이 바뀔 수는 없음. 척박한 현실에서 문학예술이 유지되는 이유임. 그래서 더욱 문학예술에 대한 보수적 시각 유지가 필요함.

* **지원 영역의 재분류가 필요함.**

: 현행 학교교육에서 진행되는 문학 교육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학작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학교교육은 진선미 교육, 사회는 흥미 교육. 이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어떤 작품을 지원하는가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

: 국가기관이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지금은 국가로부터 벗어난 예술적 자율성의 영역이 사회속의 자본에 의해 실질적 포섭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 이 경우 국가는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시장자본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예술작품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 작품들이 모든 예술적 성찰의 근본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의 예술작품들이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원의 영역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임.

: 장르 다변화 현실에서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수용하는 문제 :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공유가 필요함.

: 수필, 여행, 장르물, 웹소설 등 기존 문학 영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역과 기존 전문 영역의 충돌을 고려해야 함.

* **지원제도의 정체성** : 시장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욱더 약소자로 밀려나고 있는 예술가와, 시장 자본에서 배제되고 있는 작품의 지속적 생산을 보장해주려는 국가의 지원 : 이 경우 국가는 충분히 보수적이어도 좋다고 여겨짐.

==> 새로운 영역은 이미 디지털 시장의 속도에 의해 장악되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임. 특히 문학의 영역은 성찰의 힘이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는 깊은 성찰의 전문적 능력이 우대받았다면 지금은 확장된 속도의 기술 정보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임. 문학예술에서 국가가 지원제도를 통해 맡아야 할 역할은, 이른바 한류를 통한 경제적 장악 능력을 문학예술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된 예술적 기능을 지키고 돌보는 일일 것임. 그래야만 모든 새로운 것은 더 오래 새로울 수 있을 것임.

*** 기타 몇 가지 의견**

: 지원예산을 고려하면서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 : 일정한 수입 이상의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

: 지역의 지원제도를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심의 방식 : 심의위원들을 모두 관외 인사로 구성하는 방식

: 지역의 경우 특히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할 것임.

: 균특회계를 활용한 지역 예술 지원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과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 등. . .

토론문

지원심의제도 관련한 의견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지원심의제도 관련한 의견

양지윤(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매해 지원심의제도 개선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간담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사업 담당자는 바뀌었고, 개선에 관한 방법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었다.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한글파일은 몇 해간 반복적으로 이야기된 사항들을 문서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 문서에 언급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 필요하다. 지금의 심사위원 평은 매우 일반적이고 선정기준도 모호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알기 어렵다. 심의에서 선정된 것을 로또에 당첨되었다거나, 그 결과가 복불복이라는 평이 많은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이다. 오히려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선정 이유를 정직하게 적는 문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심사위원도 좀더 책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제도만의 권위가 생길 것이다.

PT 심의 시 인터뷰 시간 확대 및 편안한 토론형 심의 방식 진행이 필요하다. 심의를 하는 자와 심의를 받는 자 사이의 위계를 내세우기 보다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미래적인 방법일 것이다. 모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동료이며 세금을 문화예술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관계인 것이다. 인터뷰의 시간이 진솔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에 정부의 지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후생경제학적 접근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 활동 중인 대안적이고 비영리적인 예술활동을 더욱더 정교하게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금으로 대관비를 집행하여 대관화랑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방법이 교부금 정산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또한 기업이 운영또는 후원하는 사립미술관의 경우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지원의 규모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

창작산실 공간지원의 경우, **다년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사업의 경우 몇 해간 다년간 지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다시 단년 지원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비영리전시공간은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과 같은 1년을 주기로 하는 기금 일정으로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가 연말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인 관객에게도 불합리한 제도이다. 연말에는 문화예술행사가 넘쳐나서 다 볼 수 없으며, 연초에는 문화예술행사가 거의 없어 문화예술 향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년간 지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와 동시에 수시지원과 같이 탄력적인 기금 운영의 스케줄링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예술 수용자, **관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분배는 더욱 왜곡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격 차별화 또는 공연 할인권 제도 등의 차별적인 지원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저소득 계층에게만 공연 및 전시 할인권을 지급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왜곡된 소득 재분배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예술 경제의 패러독스)

덧붙여서, 한스 애빙의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예술 경제의 패러독스>에서 정부지원이 예술가의 소득수준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빈곤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예술교육과 관련된 정부정책들은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지원은 하위계층의 예술적 경험 및 교육에 거의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나서서 예술작품 및 공연의 가격을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적 취향까지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공연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정부지원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정작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까지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비효율적이다.